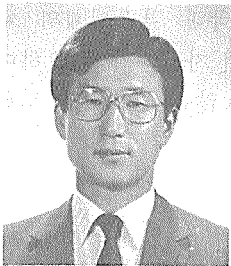


國內 電子部品 및 素材國産化의 問題點과 推進 方向



徐 柱 仁
三星電機(株) 代表理事

전자부품 산업은 전자산업 총 생산액중 48.6%, 동 수출액중 44.7%, 동 수입액중 74.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대책으로 중소기업체への 지원체제 강화,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 유도 등을 들 수 있으며 국내 부품업체의 기업체질강화 등으로 수입자유화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1. 현황과 전망

지난 '86년 1백억弗을 돌파한 전자업체 생산고는 업계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87년중 150억弗을 초과할 전망이며,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금년에 100억弗을 기록하여 섬유산업을 제치고 수출실적 1위의 간판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 산업도 지난 '81년에서 '86년까지 연평균 24.6%의 성장률을 기록, 지난 해 전자산업 총생산액중 48.6%를 점하였고, 수출 역시 44.7%의 비중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한편, 수입은 '86년 전자산업 총수입액중 74.9%라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① 세트의 수출 증대, ② 부품에 사용되는 전자재료의 국산화 미흡, ③ Chip형을 비롯한 고정밀 부품의 수입 의존, ④ 이들 부품 수입선의 지나친 대일 편중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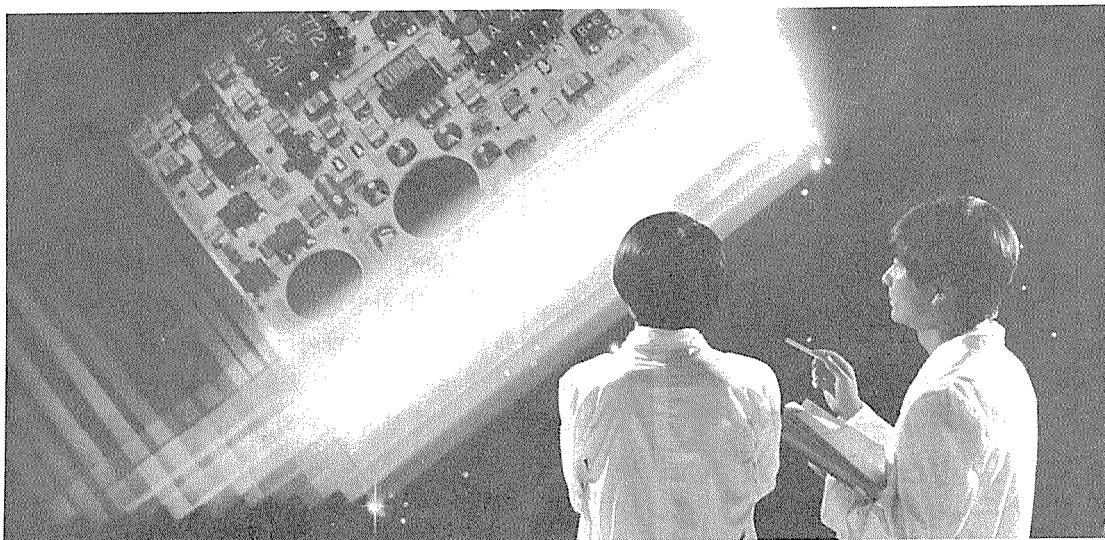
향후에도 전자부품산업은 생산 및 수출면에서 16~18%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겠지만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지 않고는 우리나라 전자산업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2. 국산화의 문제점

가. 부품 개발기반의 취약성과 국산화

국내 전자부품업체의 부품 개발은 자체설계에 의한 독자적인 것보다는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신기종에 대한 모방 개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가정용 전자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트 및 부품산업에 비해 기초소재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약하여 품질 및 생산성이 취약해 전자산업의 균형성장을 저해하는



전자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부진으로 수입의존도가 커지면서 부문별 산업의 역조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요인이 되고 있다. 전용소재의 경우 대부분 소수기업에 의한 초기 생산단계로 품질·원가·공급수량 측면에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범용 소재의 경우도 부품별 요구 특성이 상이하고 소요 종류별 수요 규모가 작아 업체들의 참여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매출액중 R & D 투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고급 기술인력이 부족해 수요증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 외국인투자 자유화와 국산화

현재 정부는 해외부품업체의 국내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PCB용 원판, 반도체 및 그 부품 등을 수입자유화 하여 전자부품분야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이를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부품·소재의 생산에 필요한 첨단기술도입과 국내 부품업체의 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부품업체의 대부분이 일본업체들로 이들 중 상당수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단순조립설비와 중·하급 기술이전에만

국내 전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단위 : 억弗)

구	분	'81	'86	'91	AAGR (%)	
					81~86	86~91
전 자 산 업	생 산	37.8	106.1	225.0	22.9	16.2
	수 출	22.2	66.9	147.0	24.7	17.1
	수 입	17.8	45.1	-	29.4	-
부 품	생 산	17.2	51.6	110.0	24.6	16.3
	수 출	9.7	29.9	70.0	25.3	18.5
	수 입	12.8	33.8	-	21.4	-
가 정 용	생 산	15.7	33.3	63.0	16.2	13.6
	수 출	11.2	24.4	46.0	16.9	13.5
	수 입	1.5	2.0	-	5.9	-
산 업 용	생 산	4.9	21.2	52.0	34.0	19.7
	수 출	1.3	12.6	31.0	57.5	19.7
	수 입	3.5	9.3	-	21.6	-

자료 : EIAK, '86 전자전기공업통계, 삼성경제연구소 예측자료

주력하고 있으며, 국산부품이 등장하기 전에 국내시장을 선정해 부품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자부품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85)

단위: 백만弗, ()는 %

구 분	생산(비중)	수출(비중)	내수(비중)
국내기업	1,643(49.0)	1,114(55.3)	486(36.5)
외자기업	1,713(51.0)	900(44.7)	844(63.5)
합	1,052(31.3)	276(13.7)	798(60.0)
단 독	661(19.7)	624(31.0)	46(3.5)
계	3,356(100)	2,014(100)	1,329(100)

다. 국내 산업정책과 국산화

전자산업의 성장과 기술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규모의 투자로는 개발이 어려운 첨단부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제품의 다양성, 기술 수준의 격차를 외면한 다분히 편파적이고 감정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해 그나마 투자여력과 인력운용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봉쇄되고 있어 국산화 등 제품개발이 지연되어 수입의존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초산업이 외국기업들의 수중에 강점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품목 중 전자분야의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도금업 등 28개, 중소기업지정 계열화업종이 TV용 튜너 등 44개, 중소기업지정 계열화품목이 PCB 등 160개, 그리고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 등이 있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일면이 있지만은 외국인투자는 허용이 되면서도 국내기업의 참여

계열화품목으로 지정된 주요 전자부품의 수입의존도('86)

(단위: 백만弗)

품 목	총수요	생 산	수 출	수 입	수입비율 (%)
다 이 오 드	71.6	37.5	23.5	34.1	47.6
고정콘덴서	318.0	233.6	65.3	84.4	26.5
가변콘덴서	29.9	17.5	9.4	12.4	41.5
고정저항기	52.8	33.7	8.4	19.1	36.2
P C B	171.4	115.6	14.0	55.8	32.6
코 벡 터	91.6	38.9	2.6	52.7	57.5
계	735.3	476.8	123.2	258.5	35.2

가 불가하다는 점 등 운용의 묘가 없으며 당해 품목의 수입량이 대량일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국산화의 추진방향

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정부는 전자부품의 국산화촉진을 위해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지원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어느 협회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우선 금융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① 신청절차가 까다롭다. (25%)

② 담보조건이 너무 부담스럽다. (21%)

등의 개선점이 지적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중 기술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기업이 69%나 되었다.

실제 그동안의 관행이나 재원의 부족, 까다로운 지원절차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정책 자체가 걸돌거나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자금대출의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해당 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실수요기업(주로 SET업체)들로 하여금 수요를 보증토록 하는 제도의 시행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은 생산설비를 도입할 때, 수출설비산업금융 등 원화대출을 허용하고 금형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지원면에서는 부품표준화로 생산성향상을 기하고 실험용 세트·치공구·검사장비 등 보유시설을 무상으로 이용케 하며, 선진기술도입을 적극 알선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책 연구과제와 KAIST·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기술인력연수를 확대시키고, 개발부품에 대한 국내업체의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공부와 과거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품·소재국산화 품목고시도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켜 힘의 낭비라는 비난을 받기

도 하는데, 가능한 한 단일화하되 실질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중소기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당장 상품화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와 양산기술인바, 정부주관의 종합기술개발 Cneter를 설립, Pool 제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나. 효율적인 외국인투자 유도

국내 전자부품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입자유화 등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역사가 짧은 국내 전자부품업계는 시장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나 부품업계는 현재의 여건을 잘 활용해 자립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선별기능을 강화해 단순조립분야보다 기술이전을 위주로 한 첨단산업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완제품기술을 들여올 때는 관련 부품분야의 기술을 일괄하여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술자체의 수준과 그 파급 및 응용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도입기술심의회(가칭)를 정부산하에 두고 도입기술을 검토하여 가치있다고 인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효과와 당장의 수익성은 희생하더라도 도입토록 하는 기술도입 진흥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내 부품업계는 기업체질강화 등 수용태세를 갖춰 수입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

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다. 부품·소재분야에의 대기업 참여 촉진

중소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반 확충은 전자산업을 위시한 한국 경제의 명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언제까지나 정책의 온실 속에서 키울 수는 없을 것이다.

지정된 사업영역내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전실한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만, 이러한 성과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는, 수출유망품목의 수출이 저해되고 수출시장개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출시장도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신제품의 출현이나 기술개발을 저해하며 제품의 성능향상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검사시설이 미비하여 불량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각각의 개별상품을 특화생산하는 것보다는 유사상품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체제가 유리한 업종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규제 및 품목별의 막연한 구획 정리보다는 기술수준에 따른 세분화된 정리가 필요하며, 부품산업의 발전차원에서 융통성 있고 조화있는 정책수립이 요망된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공업도 “速度戰”이기 때문에 失機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안에 에너지 절약 전담반을 두자.